예산안 처리 신경전…내달 2일이냐 9일이냐

〈법정처리 시한〉 〈여야 합의 연장 가능일〉

與 “법정시한 준수” 野 “날치기땐 국회마비” 공방

본회의 자동부의제 ‘시금석’…내일 원내대표 회의 주목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이 23일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돼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면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12월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2일 본회의엔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자체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입법 처리 등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12월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합의가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합의 준수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요구한 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과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은 제대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양측이 어떻게든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누리과정 예산이나 ‘사자방’ 관련 예산,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 예산 등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으면 촉박하긴 하나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당무회의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정치생명 걸고 당대표직 도전하겠다”

“지난 10년간 역대 지도부 실패한 리더십 교체 필요”

문재인 2선 후퇴 촉구…문희상과 비대위원 사퇴 설전도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산 갑)이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TV 방송에 출연 “(내년 2·8전당대회)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의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누적된 역대 지도부의 무능하고 무사 안일한 리더십이 자리잡았다”며 “실패한 리더십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는 정치생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정치 생명 그 자체를 과감하게 걸어야 하는 자리”라며 “무능하고 무사 안일한 리더십은 대표직에 정치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게도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적 자세”라고 지적했으며,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원로로 남아야 한다. 권력을 아름답게 놓을 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대에 출마하는 비상대책위원의 사퇴 문제와 관련,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한 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위원장이 비대위원 사퇴 문제가 안건이 아니라며 폐회를 선언하려 하자, 김 의원이 “이러니까 당이 죽어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문 위원장이 “당이 죽어가고 있다니, 요즘 젊은 것들이, 자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라며 버럭 화를 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무위원회의가 끝난 후, 오해를 풀고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은 2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당 대표 도전에 정치적 ‘올 인’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주승용, 공무원연금법 관련 ‘신종환 경사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3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만 지급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신종환 경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년 이내 사망’이라는 제한으로 14년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다 순직한 광주 광산경찰서 신 경사 유가족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숨진 경우에만으로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 것만을 우려한 것으로 순직자의 사정을 도외시한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며 “반드시 바로 잡아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공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만, 사망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공무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데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신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임내현, 상원의원 자격 국제검사협회 총회 참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이 22일부터 2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검사협회(IAP) 제19차 총회 및 상원회의에 상원의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30여 개국 25만 명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 기구이다. 이번 총회에는 두바이 검찰총장, 한국 검찰총장 및 프랑스·스웨덴 등 24개국 검찰총장과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고위 검찰간부 및 전·현직 국제검사협회장 등 40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다.

임 의원은 검찰 재직 시 지난 2003년 8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2004년 재직시 제9차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공로로 지난 2006년 8월 파리 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700여만명의 재외동포가 있고, 2800여만명의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고 있어 이들이 다른 나라 형사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각국 검찰간부들과 평소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두언 의원 존재감 드러낼까

수억원 수뢰혐의 무죄 선고…정치 역할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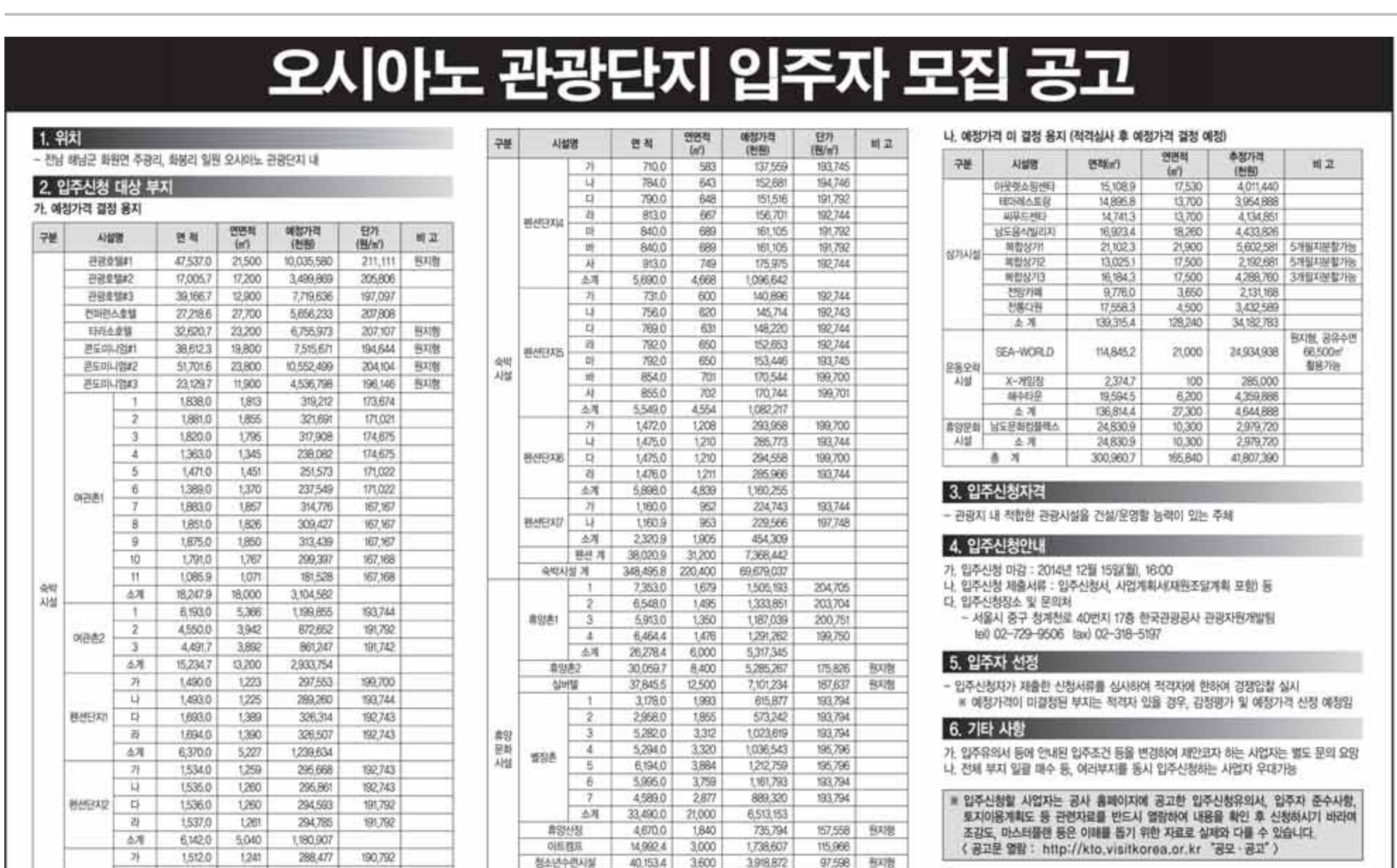
MB자원외교 비사 회고록 완성

저축은행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1일 무죄 선고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에서는 몇 안 되는 중진(3선)인 정 의원은 제18대 국회까지 개혁적 목소리를 내며 당내 소장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만큼 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 의원은 무죄 선거 이후 2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했다”면서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면서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해 ‘왕의 남자’로 통했던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후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급기야 구속되기까지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등 비사를 기록한 회고록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